

# 진정성 있는 호소, 설득력 있는 추진 삼성반도체 질환 9년의 논란 끝맺다

## 김지형 조정위원장

“조정 본질은 양보와 타협.”

9년 만에 삼성 반도체 질환 논란을 매듭지은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사진)의 지론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긴 이름만큼 복잡한 갈등을 풀어낸 건 조정자 본분에 충실한 조정위의 끈질김이었다. 법조계에서 노동법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은 2014년 10월 위원장직에 추대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일각에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삼성의 도구로 쓰인다”는 비난까지 퍼부었다.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직후 공익법인 설립, 보상방법 등을 놓고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에 갈등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는 회의감이 극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각 조정주체를 모아놓고 눈시울을 붉히며 진정성에 호소했다.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때 접점을 찾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발병자와 가족들은 보상받아야 하지만 삼성전자에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로는 반도체사업장의 근로환경과 발병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게 ‘사회적 부조’ 개념이다. 보상이나 위로나



의 차원을 떠나 삼성전자가 당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특정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조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제안이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보상과 예방활동에 쓸 1000억원의 사내기금을 출연하는 게 가능했다.

재해예방대책 최종합의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은 ‘외부 음부즈만 위원회’라는 대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소개하며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양보를 끌어냈다. 협의에 참여했던 한 유가족 대표는 “김 위원장의 추진력과 계속된 설득작업이 없었다면 최종합의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조정위원장이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 ‘조정 합의’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취임 당시 최연소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2005~2011년 재임 대법관 14명 중 유일한 비서울대 출신으로 당시 대법원 순혈주의를 완화한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합리적 균형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들으며 검소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종진 기자 free21@